

KIPEC BRIEFS

미국의회 주요동향



목차

1. 의회 일정 및 소식	2
2.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4
3. 한미 양자 무역 관계 및 주요 현안(CRS 리포트 요지)	6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9월 미국 의회·정치 주요 소식

공화당, 중간선거 전국 전당대회 개최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9월 9~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공화당 최초의 중간선거 전국 전당대회(Republican National Midterm Convention)를 개최했다. 통상 전국 전당대회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대통령·부통령 후보 지명과 당 강령 채택 등을 위해 열리는 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별도의 공식 후보 지명 절차 없이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주요 정책 의제와 선거 메시지를 제시하고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간 행사에 모두 참석해 연설했으며,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 공화당 주요 인사와 의회 선거 후보들도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경제와 세금, 치안 등 공화당의 주요 정책 의제와 함께 지난 약 2년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의 정책 성과가 강조됐으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전반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 행사장 곳곳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관련 홍보물이 배치됐으며, 일반 대중에게도 입장권이 공개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보기 위해 참석한

지지자들도 다수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고 공화당 후보들에게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중간선거에서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의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Trump dividend)'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자원 조달 및 지급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도 댈러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응하는 별도의 행사를 개최했다. '민주주의 수호 집회(We the People: Rally for Democracy)'는 9월 10일 오후 6시 댈러스 시청 광장에서 열렸으며, 일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과 지역 정치인, 텍사스주 민주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공화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 차원의 선거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미 의회, 러시아 제재 확대-이란 제재법 연장법 제정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8일(현지시간)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H.R. 5334)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안은 공법 119-111로 제정됐다. 앞서 상원은 8월 7일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수정안을 가결했고, 하원은 9월 16일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상원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 법은 지난 7월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도해 온 대러 제재 입법을 반영·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러시아 정부와 관련 인사, 금융기관, 방위산업·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활용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의 선박과 소유자·운영자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러시아 금융기관과 중대한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국인의 러시아 내 신규 투자와 러시아 국채 매입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와의 금융·투자 거래에 대한 제한도 강화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법 제정 후 30일 이내에 러시아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대통령이 상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석유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관세 조치도 포함됐다. 최근 12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한 5개국 가운데 법 제정 30일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새로 구매한 국가에는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러시아의 석유 제재 회피를 가장 많이 지원한 5개국도 최대 100%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예외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러시아 전체 연간 천연가스 수출량의 15% 미만이고, 해당 국가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관세가 모든 대상국에 동일한 수준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재나 관세 등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부의 대상국 지정과 실제 관세율 및 면제 조항의 적용이 시행 과정에서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률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1996년 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t)」의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란 에너지 부문의 특정 거래 등에 적용되는 기존 제재 체계도 유지된다. 이번 법률은 러시아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직접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와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제3국까지 경제적 조치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행 동향이 주목된다.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H.R.5334)	공포 (2026. 9. 18.)	Jimmy Panetta (민-캘리포니아) (2025. 9. 1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관련해 제재·관세 조치를 확대하고 이란 관련 제재법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법률임.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주요 수입국 등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2027회계연도 임시예산 및 기한연장법 (H.R.6500)	공포 (2026. 9. 2.)	Jason Smith (공-미주리) (2025. 12. 9.)	FY2027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예산을 제공하고 여러 연방 프로그램과 법률의 기한을 연장한 법률임. 정규 세출법안 제정 전까지 연방기관의 운영을 지속하도록 임시 재원을 제공함.
대규모 전력수요시설 송전망 연계 법안 (H.R.10579)	발의	Dave Min (민-캘리포니아) (2026. 9. 24.)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의 송전망 연결에 관한 최종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대규모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송전망 연결 절차와 전력망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임.
인공지능부 설립 법안 (H.R.10538)	발의	Greg Casar (민-텍사스) (2026. 9. 24.)	연방정부 내 인공지능부(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를 신설하고 첨단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임.
에너지·핵심광물 안보 강화 법안 (S.5551)	발의	Tim Scott (공-사우스캐롤라 이나) (2026. 9. 24.)	미국과 동맹국의 에너지 및 핵심광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임. 에너지·광물 분야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통신망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 (S.5508)	발의	Mark Warner (민-버지니아) (2026. 9. 24.)	통신사업자와 관련 공급망 참여자의 사이버보안 모범사례를 개발하기 위한 민관 합동 실무그룹을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임. 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통신 인프라와 공급망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규정함.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반도체 공급망 다자협력 법안 (S.5400)	발의	John R. Curtis (공-유타) (2026. 9. 15.)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에 관한 다자간 협력·조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임.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을 경제·외교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국제적인 공급망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디지털 자산 과세 명확화 법안 (H.R.10357)	하원 세입위원회 의결 (2026. 9. 16.)	Jason Smith (공-미주리) (2026. 9. 14.)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세금 처리 및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금융자산과의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임. 채굴·스테이킹의 과세, 소액 거래 면제, 손실·매매 관련 세금 규칙 및 브로커 신고요건 등을 정비해 납세자의 불확실성과 신고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미 양자 무역 관계 및 주요 현안 (CRS 리포트 요지)

1. 한미 무역관계와 한미 FTA

한국은 1953년부터 미국의 동맹국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은 미국의 8번째로 큰 상품 교역국이며, 미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주요 투자국인 동시에 미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주요 대상국이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교역액 기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이어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한다. 한미 FTA는 제조업 제품,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투자·지식재산권·노동·환경 및 분쟁 해결 등에 관한 규범을 마련했다. 2018년 제1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수출, 미국의 경트럭 관세 및 투자 관련 규정 등을 중심으로 협정을 개정했으며, 해당 변경 사항은 미 의회의 별도 조치 없이 시행되었다.

한미 FTA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지하는 측은 협정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경쟁 및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고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규제 투명성을 개선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증가와 디지털 무역 및 서비스 분야에 남아 있는 비관세장벽 등을 들어 일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2. 교역 및 투자 동향

2025년 한미 간 상품 및 서비스 총교역액은 2,416억 달러로, 미국의 한국 수출은 991억 달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425억 달러였다. 미국의 한국과의 상품무역 적자는 568억 달러로 2024년보다 100억 달러 감소했으며,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이 13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대미 FDI 잔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해 952억 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FDI 잔액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5년에는 374억 달러를 기록했다.

3. 주요 산업 및 무역 현안

농업 분야에서 미국은 2025년 한국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7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품의 약 3분의 2가 협정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다른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수입쿼터도 단계적으로 철폐되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관세 역시 40%에서 2026년 0%로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미국 생산자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자동차 및 관련 제품은 2025년 미국의 한국산 상품 수입 가운데 약 31%를 차지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했으며, 미국의 경트럭에 대한 25% 관세는 2018년 협정 개정에 따라 2041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연장되었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교역 규모는 세 배로 증가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일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같은 해 11월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했다.

디지털 무역과 비관세장벽도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일부 미 의회 의원을 포함한 미국 정책당국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을 미국 기업의 무역 활동을 제약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평가해 왔다. 미국 정부가 지적한 사항에는 망 사용료 도입 방안,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등이 포함된다.

2026년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관련해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규제 관행과 제한된 정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관련 조사가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쿠팡 관련 한국의 규제 관행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했으나 공식 조사는 개시하지 않았다.

4. 미국의 관세 조치와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은 한미 전략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발표했다. 이 협정은 미국의 관세 조치,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농업 및 디지털 무역 분야의 비관세장벽 등을 다루었다.

협정에 따라 자동차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제232조 관세가 한국에 대해 15%로 인하되었으며, 향후 반도체에 부과될 수 있는 제232조 관세 역시 추가 협상을 전제로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만 대부분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는 여전히 50%의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협정은 2025년 4월 행정명령 14257호를 통해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부과하려 했던 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이후 2026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해당 관세를 철회하고,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전 세계 대상의 임시 10%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 조치는 같은 해 7월 만료되었다.

2026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및 집행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구조적 과잉생산능력과 관련한 또 다른 제301조 조사 대상이기도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제301조 관세가 2025년 협정에서 합의한 15%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5.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2025년 11월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산업에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미국의 경제적·국가안보적 이익을 증진하는 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의 연간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양국 간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투자에 따른 잠재적 비용과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에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업에는 텍사스 가스화력발전 프로젝트, 원자로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6. 미 의회의 주요 검토 사안

2025년 무역·투자 협정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존 한미 FTA를 공식적으로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미 FTA와 별개의 협정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한미 FTA와 2025년 협정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한편, 2025년 협정의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할지 여부와 행정부가 협정 및 관세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요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한국의 투자를 유치할 미국 산업을 대통령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투자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의회와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2025년 협정이 한미 FTA와 별개의 독립적인 협정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행정부가 협정 이행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감독할 것인지와 행정부 주도의 무역협정에서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도 주요 검토 사안이 될 수 있다.

출처 :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733?s=3&r=64>

*본 보고서는 2026년 9월 17일 개정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U.S.-South Korea Bilateral Trade Relations」 (총 3페이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발행일 2026년 9월 29일	발행처 한미의회교류센터
『KIPEC BRIEFS』는 한미의회교류센터가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발행하는 미국 의회 입법 및 현지 소식입니다.	

KIPEC is registered under FARA.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the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KIPEC) on behalf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information is on file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